

일한 상호 오리엔탈리즘의 극복

-현대사 기술방식 분석-

시게무라 도시미쓰(重村智計)·이이무라 도모키(飯村友紀)

서론 연구의 목적-‘부존재론’에서 ‘존재론’으로	Ⅲ. 일본 교과서의 현대 한국에 대한 기술방식
I. 현대사 기술의 분석이론	Ⅳ. 북한 인식의 변천
Ⅱ. 한국 교과서의 현대 일본에 대한 기술방식	V. 새로운 패러다임 제언

서론 연구의 목적-‘부존재론’에서 ‘존재론’으로

본고에서는 주로 《日本史B》와 《世界史B》를 조사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 교과서는 고교 국사와 고교 세계사, 고교 근현대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4장의 한국·북한 인식의 변천은 연구협력자인 이무라 도모키(飯村友紀)가 집필하였다.

일본의 교과서 문제가 처음으로 외교 문제화한 것은 1982년 6월 26일이었다. 문부성의 교과서검정에서 세계사 기술 가운데 중일전쟁을 ‘華北에 침략’으로 한 원고가 ‘華北에 진출’로 개서되었다고 보도되었다. 그런데 보도된 교과서에 관한 ‘개서’는 없었다.

이 교과서 ‘개서’라는 ‘大誤報’는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월터 리프만이 저서 《퍼블릭 오피니언》에서 1922년에 쓴 ‘스테레오 타입 이론¹⁾’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월터 리프만은 국제분쟁의 원인으로 보도가 낳은 스테레오 타입적인 잘못된 이해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잘못된 스테레오 타입을 바로잡는 것이 저널리스트의 사명이라고 설명하였다.

1) Walter Lippmann, 1997. Public Opinion (Free Press N. Y.)

왜 ‘오보’가 일어났는가.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는 사전에 문부성의 기자클럽에 1권씩 전달된다. 기자클럽에서는 소속 각 사 기자가 분담하여 검토, 취재하고 기사를 썼다.

이러한 가운데 텔레비전 기자가 實敎出版의 《세계사》에 대해 ‘침략이 진출로 개서되었다’는 취재 결과를 기자클럽 각 사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 기사는 교과서 원고를 입수하여 비교한 것이 아니었다. 1982년 6월의 검정에서는 ‘개서’ 사실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검정 의견으로서 ‘침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요청했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또 이 수정 의견에 따르지 않고 ‘침략’이라는 기술을 계속해서 사용한 교과서도 있었다. 이 사건에 관한 보도는 한국에서 일본은 ‘침략을 진출로 개서시키는 악랄한 존재’라는 패러다임을 낳았다. ‘일본인은 역사를 왜곡한다’는 패러다임이 정착하였다.

일본에서의 전후 ‘네오 콜로니얼리즘’이란 무엇인가. ‘한국은 뒤떨어져 있다’ ‘한국은 가난하다’ ‘한국은 독재국가다’ ‘한국은 미제국주의의 괴뢰국가다’라는 한국 부정의 개념이다. 또 ‘그러니까 한국을 지도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콜로니얼리즘 의식이었다.

일본 좌익의 네오 콜로니얼리즘은 북한을 ‘독재’라 지적하지 않았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민주주의도 비판하지 않았다. 네오 콜로니얼리즘은 전후 일본에서 한국의 존재를 부정하는 텍스트로서 널리 존재하였다. 잡지 《世界》에서는 1984년 10월호까지 ‘남조선’의 표기가 남아있다. 일본공산당의 기관지인 《赤旗》나 잡지 《前衛》에서는 1997년 3월까지 ‘남조선’ 표기가 보인다.

일본의 좌익·혁신세력의 연구자들은 북조선을 ‘조선’ ‘공화국’으로 표기했다. 그 영향으로 아마카와출판(山川出版)의 세계사는 북한을 ‘공화국’으로 지금도 기술하고 있다.²⁾

한편 한국에서는 1990년대 초에 《일본은 없다》³⁾라는 서적이 초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한국 KBS 도쿄특파원이 쓴 책이다. ‘일본 부재’의 텍스트가 한국인의 마음에 와 닿았다.

한국의 국사와 세계사 교과서에는 현대 일본에 대한 기술은 거의 없다. 특히 전후 일본이 변했다고 서술한 텍스트는 없다. 또 그 상징인 평화헌법과 헌법9조에 대한 텍스트도 없다.

이 ‘부존재’의 언설과 ‘불변’의 상호인식은 한일 사회 상호간에 존재했던 의식이다. 이 의식을 ‘일본(한국)은 있다’ ‘일본(한국)은 변하였다’라고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2) 2007 《世界史》 山川出版社, 345

3) 鄭麗玉, 1994 《悲しい日本人》 (たま出版)

가가 본 연구의 과제이다. 이 분석을 위해 교과서의 텍스트 분석이론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쌍방 사회의 스테레오 타입⁴⁾적인 인식과 파이널 보케블러리⁵⁾ 극복의 문제이기도 하다. 나아가서는 한일간 패러다임 시프트⁶⁾의 과제인 것이다. 또 한일 쌍방에 존재하는 오리엔탈리즘⁷⁾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제에 교과서 기술은 도전하고 있는가. 혹은 반대로 편견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한다.

I. 현대사 기술의 분석이론

1. 한일의 네오 콜로니얼리즘 사관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⁸⁾는 일본인 최초의 學政參與官으로서 한일 합병 전인 1907년 대한제국에 파견되었다. 당시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⁹⁾.

나는 文部省으로부터 조선 학정참여관으로 취임을 타진받았을 때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하였다. 이 무슨 인연일까. 지금이야말로 일본이 수천 년에 걸쳐 은혜를 받은 문화에 보답할 수가 있다. 따라서 나는 내 인생을 걸고 눈 내리는 겨울의 추위도 마다않고 한국에 건너간 것이다.

여기서는 시데하라가 매우 진지하고 성실한 인물임을 엿볼 수 있다. 일본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의 따뜻한 배려가 전해져 온다.

그러나 이 말을 보면, 그는 자신을 기다리는 한국인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일본인으로는 양심적이지만 이른바 ‘모더니즘’의 강요이다. 자기의 인생관과 세계관에 대상을 맞추는 사고방식이다. 전형적인 콜로니얼리즘 발상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데하라의 생각은 전후 일본의 지식인이나 문화인, 한국과 관련된 일본의 지

4) Walter Lippmann, 1997. Public Opinion(Free Press N. Y.)

5) Richard Rorty, 1989. Contingency ,Irony, and Solidarity (Cambridge Univ. Pres)

6) Thomas S. Kuhn, 1996. The Structure of Science Revolu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7) Edward W. Said, 1978. Orientalism (Vintage Book, New York)

8) (1870~1953). 明治부터 昭和의 교육행정관, 대한제국 학부 學政參與官, 동경대 교수를 거쳐 臺北 제국대학 총장. 수상 이었던 幣原喜重郎은 동생.

9) Christine Maji Rhee, 1998. Doomed Empire (Ashgate, Hampshir, U. K.)

식민에게 공통되는 ‘일본적 오리엔탈리즘’이었다. 간단히 말하면, 한국이나 북한과 같은 작은 나라의 정치나 외교, 경제를 자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파워’ 의식이다. 이 의식은 ‘일본적 오리엔탈리즘’과 공통된다.

전후 일본에서는 이러한 콜로니얼리즘을 청산하고 반성하는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 생겨나지 않았다. 일본에서 조선사 연구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공헌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역사 연구자 중에서 ‘조선 식민지 반대’ ‘식민지를 포기하라’라는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나 식민정책에 반대했던 것은 역사학자들이 아니라 경제학자인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이나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 등 몇 명뿐이었다. 따라서 전후 일본의 한반도에 관한 연구는 콜로니얼리즘의 부정과 청산, 나아가서는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으로서는 출발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인과 조선인에의 뿌리 깊은 콜로니얼리즘을 내포한 ‘네오 콜로니얼리즘’ 의식을 확대하였다.

이 콜로니얼리즘 의식을 감추기 위해 연구자들은 북한을 예찬하였다. 북한의 사회주의와 그 지도자를 칭송하는 것으로 자기는 콜로니얼리스트가 아니며 조선인에의 차별의식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는 한편으로 한국과 한국인, 지도자에 대해 격심한 증오의 감정이나 차별의식을 드러내었다. 이것이 전후 일본에서의 콜로니얼리즘 구도이다.

전후 일본에서는 상당 기간 조선사 학자를 비롯해서 한국 문제로 발언했던 지식인, 언론인은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특파원을 신문사가 처음으로 보낸 것은 1975년이었다. 그들에게는 ‘일본어로도 조선 문제는 다룰 수 있다’는 교만함이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파워’ 의식에서 나온 일본적 오리엔탈리즘이다. 한국이나 북한은 일본어만으로도 알 수 있다는 우월의식이다.

북한을 지지하는 연구자나 언론인들은 한국이라고 기술하지 않고 ‘남조선’이라 표현하였다. 이것은 한국 ‘부존재론’이다. 한국을 주권국가 아닌 ‘미제국주의의 괴뢰’로 보고 ‘남조선’이라 기술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화국’ ‘조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편 한국·조선인 중에는 ‘한국 부정’이라는 일본인의 콜로니얼리즘 심리를 이용하여 일본의 ‘권력’이나 권위를 이용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콜로니얼리즘이 뿌리 깊게 살아남게 된 책임의 절반은 한국과 북한, 혹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 재일조선인, 한국대사관과 재일한국인, 한국의 반체제학자·지식인들에게도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후 1980년 말경까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는 한국을 ‘독재’ ‘비민주국가’ ‘뒤떨어진 나라’로 쓰도록 공작하였다. 이것은 일본인의 심층에 있는 차별이나 멸시로서의 콜로니얼리즘을 한국에게만 향하도록 하는 운동이었다. 일본의 지식인이나 언론인 대부분이 이 압력에 굴복하였다. 岩波書店의 잡지 《世界》가 이러한 운동에 협력하였다. 《世界》에는 1984년 10월호까지 ‘남조선’ 표기가 남아있다.

또 일본의 ‘권력’이나 ‘권위’와 일체화하려는 한국적 네오 콜로니얼리즘도 존재하였다. 과거 식민지 시대에는 한국인이 조선총독부나 지배층에 협력하는 ‘권력과 일체화’로서 콜로니얼리즘이 있었다. 한국의 지식인이나 ‘망명 지식인’이 일본에서 한국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박정희를 공격하는 論陳을 폈다. 그것은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화를 위해서는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째서 북한의 독재와 민주화에는 입을 다물었는가. 북한의 민주화나 강제수용소, 지도자의 독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북한의 ‘권력’에 협력하는 북한 종속의 오리엔탈리즘이었다. 북한 종속의 오리엔탈리즘은 한국에의 우월의식을 강조하고 북한의 정통성, 경제적 성공, 훌륭한 지도자의 존재를 선전하였다.

여하튼 일본인의 콜로니얼리즘 의식을 한국에게만 향하게 하는 네오 콜로니얼리즘 운동에 한국 지식인이 협력하였다.

2. 한일 상호 오리엔탈리즘

오리엔탈리즘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에드워드 사이드 교수가 만들어낸 이론이다. 1978년에 출판된 저서 《오리엔탈리즘》¹⁰⁾이 구미의 학회와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오리엔탈리즘’은 이슬람에 대한 구미의 이해가 서양 중심의 차별과 파워 의식에서 탈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 이론은 한국이나 북한에 대한 일본의 이해에도 응용할 수 있다.

구미에서는 중동이나 아시아 등 비서양국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그러한 인식의 모순을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으로 날카롭게 파헤쳤다. 일본과 한반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른바 ‘탈아론¹¹⁾’이 일본적 오리엔탈리즘의 원형이 될 것이다.

10) Edward W. Said, 1978. Orientalism(Vintage Book, New York)

11)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脫亞論’은 일본인에게는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닌 경청할만한 논리이지만, 탈아론이 악용되어 조선멸시론에 이용된 것이 문제이다.

프랑스나 영국의 문학은 오리엔트를 신비한 존재로 묘사하였다. 동양이라는 개념을 서양의 객체로밖에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이드는 말한다. 즉 서양의 지배를 받은 동양, 서양이 근대화시킨 동양이라는 인식이었다. 여기에 동양의 주체성과 독립에 대한 경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이드는 서양의 학문 연구가 동양을 주체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을 준엄하게 파헤치고 비판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은 한국이나 조선이라는 개념을 객체로밖에 보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일본의 지배를 받은 한반도, 일본이 근대화시킨 한국과 북한이라는 의식이다. 태평양전쟁 이후는 한국을 독립국으로서 보지 않는 것이 좌익 운동이었다. 일본의 좌익만큼 한국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을 노골적으로 부르짖은 이들은 없었다. ‘한국 부존재론’의 전개이다.

도고 미노루(東郷實)¹²⁾는 지금 일본에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전전에는 저명한 식민연구자였다. 그의 《식민정책과 민족심리(植民政策と民族心理)》(1925)는 岩波書店에서 출판된 당시 베스트셀러였다¹³⁾. 도고는 일본인처럼 ‘우수한 민족’이 있는 반면 식민지의 ‘하등 민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민지의 일본에의 ‘동화’를 부정하고 ‘분화정책’을 주장하였다. 식민지의 전통이나 민족성의 존중은 언급했지만, 독립이나 자치권의 부여에는 반대했다.

일본인을 ‘우수한 민족’으로 보고 한국인이나 조선인을 ‘하등 민족’으로 보는 생각은 일본사회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다. 이 콜로니얼리즘을 북한과 일본의 좌익(혁신) 세력이 이용하였다.

그래서 김대중 납치사건 이후 일본에서는 ‘한국은 두려운 나라’ ‘한국인은 무서운 사람들’ ‘한국 경제는 파탄했다’와 같은 언설이 정착하였다. 그런데 2002년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자 텔레비전과 신문은 연일 북한의 부정적인 면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북한 때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전후 일본에서는 한국인과 조선인이 북한과 한국을 각각 거칠게 욕하였다. 한국 지식 인임에도 한국과 지도자를 일본인에게 나쁘게 말하는 한국인도 있었다. 일본인의 콜로니얼리즘 의식을 선동한 것이다. 이것이 한국적 네오 콜로니얼리즘이다. 그들은 결코 북한을 비판하지 않았다.

12) 東郷實(1881~1959). 臺灣총독부에 근무하였고 그 후 정치가로. 農政通으로 알려졌다. 文部 정무 차관으로 근무했다.

13) Christine Maji Rhee, 1998. Doomed Empire (Ashgate, HampshireU. K.)

한국을 부정하고 북한만을 평가하려고 했던 네오 콜로니얼리즘이 2002년 이후로는 북한을 향했다. 그들이 증폭시킨 ‘한국 멸시’가 북한으로 향한 것이다. 네오 콜로니얼리즘의 역습인 것이다.

국민대학교의 한상일 교수는 《지식인의 오만과 편견 - 《세카이世界》와 한반도》(2008)¹⁴⁾에서 이 일본적 오리엔탈리즘을 준엄하게 지적, 비판하였다. 한상일 교수는 이 저서에서 잡지 《世界》의 창간호부터 조선 문제에 관한 기술과 언설을 상세하게 분석했다. 이 저작은 일본 진보적 문화인들의 한국에 대한 차별의식을 파헤친 한국판 《오리엔탈리즘》으로 높이 평가될만한 역작이다.

한상일 교수에 따르면, 《世界》가 전후 최초로 게재한 한국 관계 논문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문이었다. 한상일 교수는 《世界》가 ‘반한친북’ 노선을 일관되게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世界》가 1973년 5월부터 88년 3월까지 15년에 걸쳐 게재한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은 일본의 한국 부정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만들었다. 필자는 ‘TK생’이라 표기되었다.

나중에 지명관 교수가 ‘내가 TK생이다’라고 자기 이름을 댔는데 일본의 전문가 사이에서는 여전히 ‘지명관 교수뿐만이 아니다’며 의문시되고 있다. 그는 도쿄에서 집필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은 한국에서 편지를 보내오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런데 도쿄에서 쓴 것이므로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이 아니라 ‘도쿄로부터의 통신’이다. 저널리즘의 기본에서 보면 날조기사이다.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은 북한의 독재나 정치범수용소, 인권문제, 민주화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오로지 한국을 비판하고 박정희를 공격하였다. 지명관 교수의 행동은 한국적인 네오 콜로니얼리즘이며 북한 종속의 오리엔탈리즘(북한에 협력한다는 의미)이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라는 ‘파워’와 《世界》라는 ‘권위’를 빌려 오로지 ‘반한친북¹⁵⁾’ 선전에 줄곧 가담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목사로 활약했던 일본인 사와 마사히코(澤正彦)¹⁶⁾ 씨는 일찍부터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은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아니다’ ‘한국인에 대한 애정도 연대도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였다. 사와 목사가 이 말에 담은 의미는 구약성서의

14) 韓相一, 2008 《지식인의 오만과 편견 - 《세카이世界》와 한반도》 (기과랑)

15) 한상일, 앞의 책

16) 澤正彦, 1984 《ソウルからの手紙》 (草風館)

예언자들은 왕이나 위정자를 심하게 비판했지만 이들의 말에는 같은 민족에의 애정과 연대의식이 있었다는 성서해석의 이야기이다. 이에 비해 기독교 신자인 지명관 교수의 문장에 같은 국민과 위정자에의 연대도 애정도 느낄 수 없다는 지적은 결정적이다.

한상일 교수는 잡지 《世界》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세카이》가 진심으로 김일성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전지전능한 지도자로 생각했을까 하는 점이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굶주림을 견딜 수 없어 목숨을 걸고 북한을 버리는 탈북 난민이 늘어나는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한, 《세카이》는 박정희가 정말로 이성도 국가관도 없고 다만 권력만을 추구한 폭군과 같은 존재라고 확신했을까 하는 것이다. 만일 확신했다면 오늘날의 경제성장과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능력이 있고 국정 수행을 효과적으로 실시한 대통령으로 누구보다도 박정희를 높이 평가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¹⁷⁾

또 한상일 교수는《世界》가 내포하고 있는 네오 콜로니얼리즘과 일본적 오리엔탈리즘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개념규정을 하고 준엄하게 비판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진정으로 민족 화해가 필요하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지식인의 역할이 막중하다. 특히 가해자였던 일본 지식인의 ‘진실’을 바탕으로 한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세카이》가 과거사에 관하여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선린의 관계 정립을 위하여 노력한 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진정한 민족 화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심층에 깔려 있는 우월 의식을 바탕으로 인권과 양심을 내세워 북한을 떠받들고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 때문에 화해로부터 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¹⁸⁾

한상일 교수가 지적한 일본적 오리엔탈리즘의 배후에 있던 사상의 정황에 대해서 中央公論誌 전 편집장으로 일본 논단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가스야 가즈키(粕谷一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¹⁹⁾

동서냉전 격화로부터 한국전쟁 발발이라는 국제적 긴장 속에서 기도된 강화조약에 대해, 이에 반대한 광범위한 여론은 지극히 다양한 주장, 잡다한 색채를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상징적인 것으로서 남바라 시게루(南原繁) 도쿄대학 총장을 중심으로 한 도쿄대 아카데미즘, 혹은 岩波書店에 의해 형성된 평화문제간담회, 또는 류 신타로(笠信太郎)와 朝日新聞을 중심으로 주장

17) 한상일, 2008 《지식인의 오과 편견－《세카이世界》와 한반도》(기파랑) 341

18) 한상일, 앞의 책, 342. 밑줄은 필자가 표시한 것임.

19) 粕谷一希, 2008 《戰後思潮--知識人たちの肖像》(藤原書店) 165

된 전면강화 이론은 형식적으로는 냉전이론 자체의 부정, 자본주의·사회주의 체제의 이론상의 근사치적 접근, 유럽에서의 오스트리아, 스위스와 같은 냉전이탈 중립국가에의 지향과 같은 이상주의적 색채가 강하였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러한 상징적인 주장의 그늘에서 하부구조를 장악하고 실제적 정치공간에서 활동한 세력은 사회당·공산당·노동조합·급진파 지식인의 공산진영(평화세력이라 규정된)과 호응한 인민전선이론이며 일본을 미국 진영에서 분리시켜 중립화시킴으로써 마침내 사회주의 혁명으로의 길을 개척하려는 ‘혁명 이론’과 구별하기 쉽지 않은 정치 주체였다.

이 가스야 전 편집장의 설명은 한국에 대한 일본적 오리엔탈리즘의 기원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지식인이나 아카데미즘을 지배했던 ‘이상적 평화주의’는 북한을 평화세력으로 규정하고 한국을 미제국주의 세력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또 좌익세력의 ‘인민전선이론’이 북한의 ‘통일전선공작’과 연동했기 때문이었다.

3. 스테레오 타입, 패러다임과 파이널 보케블러리

한일의 스테레오 타입 사고

한상일 교수가 지적한 문제는 스테레오 타입적²⁰⁾인 한국 이해와 그 폐해라 설명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반성하지 않는 일본인’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일본인의 역사 왜곡’이라는 주장도 지배적이다. 일본인도 ‘한국인은 아무리 사죄해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스테레오 타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북한이 일본을 공격해 온다’라는 스테레오 타입 사고도 있다.

한일 교과서문제의 발단이 된 “‘침략’을 ‘진출’로 바꿔 썼다”는 이해도 스테레오 타입적인 기억이었다. 이 ‘오보’ 덕분에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다. 이전의 ‘침략’기술에 대해 수정하라는 검정의견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3점의 교과서는 검정의견을 받아들였지만 6점의 교과서는 이 검정의견에 따르지 않고 ‘침략’ 표현을 쓰고 있었다.

한일의 패러다임과 패러다임 시프트

스테레오 타입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패러다임 이론을 창조한 것이 토마스 쿤²¹⁾ 교수

20) Walter Lippmann *Public Opinion* Free Press N.Y., 1997

였다. 그는 세계적인 과학사 연구자이다. 인류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어떻게 생각을 바꿨는지를 연구하고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창조하였다.

예전에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고 믿었다. 이 상태를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어떤 특정 시대 하나의 사회나 집단이 공유하는 같은 생각이나 인식, 개념을 패러다임이라 불렀다. 쿤은 천동설을 끝까지 파고들어 아무리 탐구해도 이해불가능에 빠졌을 때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 상태를 ‘Incommensurability(통역할 수 없는 견해)’라고 불렀다. 그리고 패러다임이 바뀜으로써 역사가 변하였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그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불렀다.

일본인이 한국에 대해 가지는 패러다임과, 한국인이 일본에게 가지는 패러다임은 전혀 다르다. 한일 양국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우호적인 관계를 쌓는 데에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

파이널 보케블러리

Final vocabulary(최종어휘)란 미국의 세계적인 철학자 리처드 로티 교수²²⁾가 창조한 이론이다. 파이널 보케블러리란 어떤 언어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 누구도 반대할 수 없고 을 제시할 수도 없는 말을 의미한다. 로티 교수는 이 파이널 보케블러리를 타파하는 것이 역사를 바꾸며, 이를 실행하는 인물을 ‘아이러니스트’라 부르고 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 이론은 스테레오 타입적인 사고의 변경이나 패러다임 시프트 이론을 더 발전시킨 이론이다. 파이널 보케블러리는 그 어휘를 사용하면 누구도 반대할 수 없고 납득할 수밖에 없는 ‘최종적인 말’이라는 의미에서 ‘최종어휘’라고 부른다.

로티 교수에 따르면, 최종어휘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한계를 의미한다.

한일 간에는 다수의 파이널 보케블러리가 있다. 한국에서는 ‘일제’나 ‘독도’ ‘친일’은 다른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파이널 보케블러리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원폭’이나 ‘북방영토’ ‘천황’이 그러하다.

이 파이널 보케블러리가 타파되면 역사가 바뀌고 사회가 변한다. 로티 교수는 파이널 보케블러리를 타파하는 인물을 리버럴 아이러니스트라 불렀다.

21) Thomas S. Kuhn,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

22) Richard Rrty, 1989. Contingency, Irony, And Solidarity(Cambridge university press)

4. 내셔널리즘과 아이덴티티, 내셔널 트라우마

어떤 국민이나 민족에게도 내셔널 트라우마라고 부를만한 민족적, 역사적 기억이 있다.

한국의 간디라 불렸던 종교가 함석헌은 한국의 내셔널 트라우마를 ‘고난의 민족’으로 표현하고 저서 《뜻으로 본 한국역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고생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나온 사람 같다. 4천 년 넘는 역사에 우리는 이제껏 태평 시대라는 것을 모른다. 한옛적은 아득해 알 수 없고, 삼국시대 이후로는 글자 그대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다. ... 그러므로 나라땅은 줄곧 줄어만 들었다. 삼국시대 이후로는 나라땅을 한 치도 넓힌 것은 없고 늘 빼앗긴 것뿐이다. ... 다른 민족에서 보면, 2백 년, 3백 년의 평화시대가 있었는데, 우리에게서는 힘써 본대야 백 년 지난 것이 없고, 그것도 온전한 것이 못된다. ... 한민족이 만일 잔패민족(殘敗民族)이라는 더럽고 불쌍한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거든 이제라도 어서 세계적 사명을 자각해야 한다.

함석헌은 식민지 시대에 투옥된 경험을 가진 기독교 신자였지만 열광적인 민족주의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 문장에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뜨거운 내셔널리즘 사고가 넘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독립 후 한국의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는 ‘반일’과 ‘반공’이 내셔널 아이덴티티였다. 혹은 ‘반일 내셔널리즘’ ‘반공 내셔널리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내셔널리즘이란 무엇인가. 神戸大學의 기무라 간(木村幹)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사람들이 ‘공통의 친근감’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국가’를 가지려고 하는 바람²³⁾

일본에 의해 국가를 잃고 또 한국전쟁으로 거의 국가를 잃어버릴 뻔했던 경험에서 한국인이 국가 건설에의 강한 내셔널리즘을 가지게 된 것은 당연하다. 한국민에게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내셔널 트라우마이다. 한국인은 ‘日帝’ ‘식민지’ ‘拓殖’ 등의 말을 들으면 반사적으로 반발하고 감정적으로 흥분될 것이다. ‘척식’이라는 말은 ‘동양척식회사’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동양척식회사’가 가난한 농민의 땅을 수탈했다고 배우고 있다. 이에

23) 木村幹, 2009 《近代韓國のナショナリズム》 (ナカニシヤ出版) 221

대해 서울대학교 이영훈 교수가 ‘수탈론’은 사실과 다르다는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²⁴⁾

그러나 이영훈 교수의 연구와 발언은 격심한 비난을 받았다. 한국사회에 퍼져있는 스테레오 타입적인 이해로는 일본은 늘 ‘수탈한 사람들’이었다. 그러한 패러다임에 도전한 이영훈 교수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시도하여 파이널 보캐블러리를 바꾸려 했던 용기 있는 ‘아이러니스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친일’의 낙인이 찍히면 사회적으로 말살된다. 이 때문에 일본에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은 늘 ‘친일’ 비판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조금이라도 일본을 평가하고 일본에 호의적인 발언을 하면 ‘친일’이라고 공격받았다.

‘반일’은 한국민의 내셔널 아이덴티티인 동시에 한때는 통일의 내셔널 아이덴티티로서도 학생들 사이에서 인식되었다²⁵⁾. 그 후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는 좌익세력이 ‘반미’를 내셔널 아이덴티티로서 강조하려고 하였다.

II. 한국 교과서의 현대 일본에 대한 기술방식

1. 일본의 패전과 日帝

《고등학교 국사》(2007년판, 국사편찬위원회, 국정도서편찬위원회) 교과서에는 일본의 패전과 한국 독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였다. 이는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하고, 동시에 우리 민족이 국내외에서 즐기차게 독립투쟁을 전개한 결과였다.²⁶⁾

일본의 패망을 확신하고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준비해 왔던 대한 민국 임시 정부는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 공화국의 수립을 규정한 대한 민국 건국 강령을 제정, 공포하였다.²⁷⁾

이에 대해 함석헌 씨는 다음과 같이 썼다.²⁸⁾

24) 李榮勳, 2009 (永島廣紀 譯)《大韓民國の物語》(文藝春秋)

25) 金學俊 교수와의 인터뷰, 김학준 교수는 1970년대 후반에 이러한 지적을 하였다.

26) 《고등학교 국사》(2007년판) 123

27) 《앞 책》 123

28) 咸錫憲, 1993 《苦難の韓國民衆史》(新敎出版社), 303(이 제목은 잘못 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이 해방에서 우리가 첫째로 밝혀야 하는 것은, 이것이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는 것이다. 해방 후 분한 일, 보기 싫은 꼴이 하나 둘만 아니지만, 그 중에도 참 분한 일은 이 해방을 도둑해가려는 놈들이 많은 것이다. 그들은 자기네만 이 해방을 미리 알았노라고 선전한다. 그것은 그들이 이 도둑같이 온 해방을 자기네가 보낸 것처럼 말하여 도둑해가려는 심장에서 하는 소리다. … 너와 내가 다 몰랐느니라. 다 자고 있었느니라. 신사참배하라면 허리가 부러지게 하고, 성을 고치라면 서로 다투어가며 하고 … 이 나라가 해방될 줄을 미리 안 사람은 하나도 없다.

국사 교과서는 ‘日帝’라는 기술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일제’란 무엇인지 명확한 개념 규정을 하지 않았다. 북한과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일부 군국주의자’ ‘일부 제국주의자’라는 입장으로 일관해서 군국주의자와 일반국민, 나아가서는 군국주의에 저항했던 일본인들을 구별하고 있다.

‘일제’란 천황인가, 군부인가, 또는 조선총독부인가. 그렇지 않으면 관료나 신문기자까지도 가리키는가. 한국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²⁹⁾

일제는 국권을 강탈 후 조선교육령을 만들어 식민지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강조하면서,

이 ‘일제’는 ‘조선총독부’라고 쓰는 편이 구체적이며 개념도 명확하다. 한국의 역사교과서 기술에는 ‘조선총독부’의 명령이나 행정, 단속의 주어를 ‘일제’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일제’라는 개념에는 일본 정부에서부터 일반의 일본국민까지 전부를 포함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본국민 중에는 ‘일제’를 비판하고 ‘식민지 반대’를 부르짖으며 저항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일제’ 중에도 와세다대학 졸업생이었던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은 ‘조선의 독립’을 설파하고 ‘조선을 포기하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3·1독립운동 후에 《東京經濟新報》에 조선의 독립을 지지하는 다음과 같은 사설을 썼다.

무릇 어떤 민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민족의 속국이 되는 것을 유쾌하게 여기는 사실은 예로부터 거의 없다. … 조선인은 하나의 민족이다. 그들은 그들의 특수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 다년간 그들의 독립 역사를 가지고 있다.

조선, 臺灣, 樺太도 버릴 각오를 하라, … 대일본주의, 즉 일본 본토 이외에 영토 혹은 세력 범위를 확장하려는 정책이 경제상, 군사상 가치가 없다는 것³⁰⁾

없다. 저자의 의도를 살린다면 《意味としての韓國史》라고 해야 한다.
29) 《고등학교 국사》 (2007년판) 322

이러한 일본인까지 ‘일제’ 속에 포함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국 교과서에 한국을 위해 ‘일제’에 반항하고 싸웠던 일본인을 정확히 기술해 주기 바란다. 이시바시 단잔을 비롯해 변호사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민예가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와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동화정책을 비판한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조선의회 설립과 자치를 요구했던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 등 한국을 위해 ‘일제’와 싸운 일본인에 대한 기술은 한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역사 기술이 된다.

‘일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미국의 일본사 연구의 일인자인 스탠포드대학의 Peter Duus 교수는 저서《The Abacus And Sword》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는 ‘明治의 제국주의’와 그 후의 ‘군국주의’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I will argue that Meiji imperialism, and more specifically expansion into Korea, was the product of a chorus of domestic politicians, journalists, businessmen, and military leaders, with a subimperialist Japanese in Korea.³¹⁾

한국 교과서의 기술을 보면 제국주의자와 일반국민, 더 나아가 저항했던 일본인, 한일 합병에 반대했던 일본인을 구별할 수 없다. 이것은 한국적인 내오 콜로니얼리즘이다. ‘일제’라는 말을 사용하면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하며 개념도 애매하다. 반대로 ‘왜 일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가’라고 비판받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일제’라는 말은 한국에서의 ‘파이널 보케블러리’이다. 국사 교과서는 전후의 일본 국민이 전쟁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않을 결의로서 ‘평화헌법’을 제정한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헌법9조나 천황제의 변화, 민주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도 전혀 기술하지 않았다. 전후 일본의 자민당과 사회당, 공산당의 존재나, 노동자의 권리확대와 노동운동 등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기술도 없다.

그러므로 국사 교과서에서는 전후 일본이 ‘부존재’로 취급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교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금성출판사의 《세계사》(2007년판)가 東京裁判과 일본의 고도성장에 대해 기술했을 뿐이며, 다른 교과서에는 전후의 일본에 대한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³²⁾

금성출판사의 《고교 세계사》는 도쿄재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30) 石橋湛山, 《東京經濟新報》 사설 1921년 7월 30일, 8월 6일, 8월 13일

31) Peter Duss, 1995. The Abacus And Swor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3

32) 지학사와 교학사의 고교 세계사에는 일본에 대한 기술은 없다.

도쿄 재판은 전쟁의 핵심 책임자인 히로히토 국왕을 제외한 채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더구나 냉전 체제하에서 일본을 자유 진영에 묶어 두려는 미국의 정책 덕분에 일본의 정계·재계는 전범들이 다시 장악하였고, 이후 끊임없이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켜 왔다. 반성 없는 일본의 태도는 뉘른베르크 재판이 끝난 후에도 스스로 나치 전범들을 법정에서 세우고 전쟁 피해자에게 배상을 다 하면서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고 있는 독일의 정책과 비교된다.³³⁾

이 기술은 우선 ‘극동군사재판’이라는 정식명칭을 정확히 기술하지 않았다. 천황을 제외시킨 이유로 ‘일본을 자유진영에 묶어 두려 하였다’라는 기술은 기록상 판단하면 틀린 것이 아닐까. 미국은 일본 통치를 위해서는 천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또 천황의 칭호를 ‘국왕’이라 기술하고 있다. ‘천황’이라고 기술할 수는 없는 것일까.

더구나 전범의 처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의 정계나 재계는 전범들이 다시 장악하였다’라는 기술은 틀렸다. 전후의 ‘공직추방’이나 극동군사재판의 판결을 받은 뒤 법적 절차를 거쳐 사회에 복귀한 것이다. 전범들이 전후의 일본을 다시 지배하였다는 기술에는 문제가 있다.

‘반성 없는 일본의 태도’라는 기술은 삭제하기 바란다. 천황의 한국 대통령에의 ‘말씀’이나 무라야마(村山) 담화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천황과 일본 수상에의 ‘사죄’나 ‘반성’ 방식 등 표현 방법이나 절차가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적해야 한다.

일본 국민이나 여론의 대부분은 이웃 나라를 식민지화해서 아시아에서 침략전쟁을 한 것을 반성하고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독일과의 비교에 대해서도 독일은 유대인 대량학살이라는 人道에 반하는 죄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유대인 학살에 관계했던 나치 멤버의 책임을 추궁한 것이다.

대부분의 일본인은 패전으로 일본이 변했다고 판단한다. 천황중심제에서 국민주권으로 바뀌고 민주화하였다. 또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하였다.

2. 한국전쟁

한국전쟁에 관한 교과서 기술은 한국 교과서와 일본 교과서의 기술 방식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국 교과서의 기술을 소개한다.

《고등학교 국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33) 2007 《고교세계사》 (금성출판사) 288. 밑줄은 필자가 표시한 것임.

북한은 소련의 지원하에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남침을 강행하였다. 유엔은 전쟁이 나자 안전 보장 이사회를 소집하여 북한의 남침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였고,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개국이 유엔군을 파견하였다.³⁴⁾

한국 교과서는 이전에는 전쟁 책임을 북한의 김일성 주석에게 돌리는 기술을 분명히 했으나, 이 교과서의 기술방식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민족에 대한 책임 지적이 제법 약화되었다.

1998년판 《고등학교 국사》는 더 강한 표현으로 김일성 주석의 이름을 명기하고 책임을 엄중히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정세를 이용하여 전쟁을 준비하였다. 김일성은 비밀리에 소련을 방문하여 남침을 위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³⁵⁾

이 기술은 한국전쟁의 책임이 김일성 주석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3. 한일기본조약

한일기본조약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국사》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 실현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사회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를 억누르고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1965).³⁶⁾

이 기술은 일본으로부터의 경제협력자금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

《한국근현대사》(천재교육사, 2007년)만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일본에서 제공된 청구권 자금은 한국의 경제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³⁷⁾

34) 2007 《고등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125

35) 1998 《고등학교 국사》 (교육부) 199

36) 2007 《고등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126

이것은 한국 교과서의 기술 중에서는 상당히 용기있는 표현이다. 한국의 반일 패러다임 감정을 수정하고 파이널 보케블러리를 타파하는 중요한 기술이다.

한일기본조약이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객관적 사실로서 경제협력자금이 도움이 되었는지 혹은 되지 않았는지. 이 시기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가 그 후 한국의 발전으로 이어졌는지 어떤지 등을 냉정하게 기술해도 괜찮지 않을까.

일본은 경제협력자금으로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차관 3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였다. 당시 한국의 국가예산은 약 3.5억 달러였으며 일본의 외화 준비고는 겨우 18억 달러였다.

이에 대해서 《고교근현대사》(대한교과서, 2007년)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무상 3억 달러와 정부 차관 2억 달러, 민간 상업 차관 1억 달러 이상을 받는 조건으로 한·일협정이 체결되고 말았다.³⁷⁾

이것은 마치 이 금액이 의미가 없다는 듯한 기술방식이다. ‘체결되었다’는 표현이라면 또 몰라도 ‘체결되고 말았다’라는, 텍스트에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담으려 하고 있다.

당시 일본과 한국의 경제력, 예산, 무역액에서 보면, 거액의 경제협력자금이었다는 사실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물론 자금제공에 얽힌 의혹이 존재한 것도 사실이다.

4. 평화헌법에 대한 기술 부재

일본은 1946년에 신헌법을 공포했다. 明治헌법의 천황 통치권을 폐지하고 주권재민,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을 축으로 하며, 천황에 대해서는 정치권력을 가지지 않는 ‘상징 천황제’로 되었다.

이것은 일본의 정치시스템이 혁명적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또 헌법 9조는 전쟁포기를 명문화하여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하였다. 더구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고 戰力を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기되었다.

이는 ‘일제’와 ‘일본군국주의’가 소멸하고 그 반성 위에 전후의 신생 ‘일본국’이 태어

37) 2007 《한국근현대사》(천재교육사) 296

38) 2007 《한국근현대사》(대한교과서사) 273

난 것이다. 그런데 한국 교과서에서는 일본국 헌법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헌법 9조에 대한 기술도 전혀 없다.

한국 교과서의 기술에는 ‘일제’가 멸망한 후 일본에 어떤 나라가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다. 일제 멸망 후의 일본을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설명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일본국 헌법은 전후 일본을 이해하는 데에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것을 무시하여 기술하지 않고서는 이웃나라의 역사나 한일우호를 교육하기는 어렵다. 한국 교과서에 일본국헌법의 의의와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술을 강하게 바란다.

5. 김대중 납치사건도 기술 부재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3년 8월 8일 도쿄 그랜드팰리스 호텔에서 대낮에 납치되었다. 한국 교과서와 일본 교과서에는 이 사건에 대한 기술이 없다.

사건은 한국에 의한 일본의 주권침해인 동시에 한국 민주화운동 지원과 그 후의 박정권 붕괴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일본의 매스컴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김대중 씨 구출과 한국의 민주화에 관심을 보이고 민주화운동을 지원하는 여론을 형성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한일관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한일 쌍방이 모두 교과서에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사건은 일본 매스컴 및 일본국민이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다. 또 일본인의 ‘주권의식’을 부활시키는 데에 크게 작용하였다.

6. 고이즈미(小泉)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와 朱基徹 목사

한국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비판하고 정부와 보도기관, 여론도 일치해서 반대하였다.

왜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한국민은 반대하는가. 와세다대학의 한국 유학생에게 물었더니, 누구도 정확한 설명이나 이론을 전개하지 못했다. 한국이 왜 반대하는지는 일반 일본인도 한국인 유학생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은 한국 교과서가 식민지 하의 ‘신사참배’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신사참배에 대해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기독교는 1930년대에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를 거부하여 많은 신자가 투옥되거나 학교가 폐쇄되기도 하였다.

이 기술은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렸다.

먼저 ‘일제’란 누구인가. 조선총독인가, 혹은 조선총독부 관리인가, 도지사인가, 경찰인가.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은 조선총독부라고 써야 할 것이다. 또 당시 조선의 많은 기독교 교회와 교단은 1930년대 말에는 신사참배에 따랐다.

일본기독교단 초대 총리 도미타 미쓰루(富田滿) 목사는 한국 기독교회에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서간’을 보냈다. 조선총독부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미션 스쿨이나 교회를 폐쇄시켰다.

우선 한국 기독교회가 결국은 신사참배에 응한 사실은 기술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최후까지 참배를 거부하고 1944년에 평양 감옥에서 옥사한 주기철 목사나 신자의 일을 기술하기 바란다.

주 목사에 대한 평가는 한국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결코 높지 않다. 그가 독립운동에 직접적으로는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따라 신사참배를 거부한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정치행위이다.

주 목사의 행동은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기술한 ‘심정윤리’와 ‘책임윤리’의 통합이라는, 기독교 신자의 영원한 과제에 회답을 제시한 역사적 행위이며 세계사적인 순교였다. 신앙에 따른 행위가 정치적인 의미를 가졌다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독립운동인 것이다.

한국 정부와 지도자는 주기철 목사 등의 신앙과 행동에 대해 말하고 야스쿠니신사 참배 반대를 일본에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 신자와 신앙, 그리고 한국민을 위해 위대한 정신적 유산을 남긴 주 목사에 대해서 한국 교과서는 정확히 기술하기 바란다.

7. 천황의 ‘말씀’과 무라야마(村山) 담화, 사죄

한국 교과서는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문제 삼지만, 반성과 사죄에 관한 천황의 ‘말씀’과 ‘무라야마 담화’를 기술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과가 있다.

먼저 1965년 한국의 李東元 외무부장관과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외무대신의 공동커뮤니케에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다음과 같이 표명되었다.

시이나 외무대신은 이 외무부장관의 발언에 유의하고 이와 같은 과거의 관계는 유감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였다.³⁹⁾

또 역사교과서문제가 일어났던 1982년 8월에는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관방장관이 ‘역사교과서에 대한 정부 견해’로서 다음과 같은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하였다⁴⁰⁾.

1. 일본 정부 및 일본국민은 과거 우리나라의 행위가 한국, 중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각국의 국민들에게 막대한 고통과 손해를 끼친 것을 깊이 자각하고 이와 같은 일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결의 위에 평화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우리나라는 한국에 대해서는 1965년의 일한 공동커뮤니케에서 ‘과거의 관계는 유감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인식을, 중국에 대해서는 일중공동성명에서 ‘과거 일본국이 전쟁을 통해 중국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인식을 말했는데, 이것도 앞에서 서술한 우리나라의 반성과 결의를 확인한 것이며 현재에도 이 인식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다.
2. 이와 같은 일한 공동커뮤니케, 일중공동성명의 정신은 우리나라 학교교육, 교과서 검정에 즈음해서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는 것인데, 오늘날 한국, 중국 등으로부터 이러한 점에 관한 우리나라 교과서 기술에 대해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아시아 근린제국과의 우호, 친선을 진전시키는 위에 이러한 비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정부의 책임으로 시정한다.
3. 이를 위해 향후 교과서검정 시에는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검정기준을 고치고, 앞에서 적은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도록 배려한다. 이미 검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조속히 같은 취지가 실현되도록 조치하겠는데, 그때까지의 조치로서 문부대신이 소견을 밝혀 전술한 두 취지를 교육의 장에서 충분히 반영시키기로 한다.
4. 우리나라는 향후에도 근린 국민과의 상호이해 촉진과 우호협력의 발전에 힘쓰며 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나갈 생각이다.

이 미야자와 담화에서의 중요 어구는 ‘시정’이라는 말이다. ‘바로잡다’는 의미의 말로는 ‘시정, 수정, 정정’이 있다. ‘시정’은 현대 일본어 감각으로는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는 상당히 약하다. 윤리적인 대응이나 자세의 문제로서 받아들여지기 쉽다.

일본어에서는 ‘정정’이 가장 강한 어감을 내포한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시정’이 가

39) 韓日共同コミュニケ, 1965년 2월 20일

40) ‘역사교과서’에 관한 宮澤 관방장관 담화, 1982년 8월 26일

장 강한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야자와 담화는 ‘시정’의 단어를 사용했는데, 일본 정부나 일본국민의 감정에서 보면 적당히 ‘시정’해 두면 된다고 받아들여지게 된 일면이 있다.

미야자와 관방장관 담화에 대해서는 역시 ‘말로만 한 사죄다’라고도 비판받는다. 그러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누가 해야 하는가. 한국에서는 천황의 사죄를 요구하는 소리가 강했다.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침략전쟁이나 한일 합병도 천황의 이름으로 행해졌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본국 헌법은 ‘천황은 국정에 관여하는 권능을 가지지 않는다⁴¹⁾’고 규정되어 있어서 천황의 직접 사죄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입장을 수정하여 1984년 한국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일본을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에게 천황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였다.⁴²⁾

돌이켜 생각하면, 귀국과 우리나라는 一衣帶水의 이웃나라이며 이 사이에는 예로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한 교류가 행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귀국과의 교류에 의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기원 6, 7세기 우리나라의 국가형성 시대에는 다수의 귀국인이 도래하여 우리나라 사람에게 학문, 문화, 기술 등을 가르쳤다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랜 역사에 걸쳐서 양국은 깊은 이웃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금세기 한 시기에 양국 간에 불행한 과거가 있었음은 참으로 유감이며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양국의 노력과 협력에 의해 장래를 향해 더욱 더 우호와 친선이 깊어지고 함께 번영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음은 제가 깊이 기뻐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전두환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우리 양국 간에 있었던 불행한 과거는 지금부터 더 밝고 더 친근한 한일 간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데에 귀중한 초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 말은 한국 대통령이 천황의 말을 ‘반성’이나 ‘사죄’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한국 신문도 ‘일황의 유감 사죄를 받다’(서울신문), ‘불행한 과거는 “유감”의 사죄를 받다’(조선일보), ‘일황, 한국 식민통치를 공식사죄’(중앙일보)라고 보도하였다.⁴³⁾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천황의 말에 대해서는 ‘불행한 과거’를 초래한 주체가 일본임

41) 日本國憲法 제 4 조

42) 《朝日新聞》 1984년 9월 7일 조간 <天皇陛下 あいさつ 全文>

43) 《朝日新聞》 1984년 9월 7일 조간

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8년 10월에 방일하였다. 이때는平成천황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하였다.⁴⁴⁾

한반도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밀접한 교류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닫고 있던 에도시대에도 우리나라는 귀국의 사절을 끊임없이 맞이하여 조야 모두 환영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한반도와 우리나라와의 오래되고 풍요로운 교류의 역사를 뒤돌아 볼 때, 昭和천황이 “금세기 한 시기에 양국 간에 불행한 과거가 있었음은 참으로 유감이며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상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의해 초래된 이 불행한 시기에 귀국인들이 맛보았던 고통을 생각하면 저는 痛惜의念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말로 천황은 ‘불행한 시기’가 ‘우리나라(일본)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일본의 책임을 밝히고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사죄’의 의향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대해 노태우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답례로 천황의 ‘사죄’를 받아들였다.⁴⁵⁾

아득히 먼 고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친하게 지내 왔습니다. 양국 국민은 좁은 해협을 넘어 서로 왕래하고 상대국의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양국 간에는 환영해야 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근세에 들어와 고통을 받는 한 시기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양국 간의 오랜 선린우호의 역사에서 볼 때 어두운 시대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지워지거나 잊혀지는 일은 없습니다만 한국민은 언제까지나 과거에 속박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양국은 진정한 역사인식에 입각하여 과거의 잘못을 씻어버리고 우호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 역사와 새로운 일본을 상징하는 폐하가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신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바야흐로 우리 양국이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 신뢰하는 우방으로서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장애가 되어온 과거 역사의 그늘을 지우고 잔재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국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우리의 자손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

270년 전 조선과의 외교를 담당했던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는 ‘誠意와 信義의 교제’를 신조로 하였다고 전합니다. 그의 상대역이었던 玄徳潤은 동래에 誠信堂을 짓고 일본 사절을 접대했습니다. 향후 우리 양국관계도 이와 같은 상호존중과 이해 위에 공동의 이상과 가치를 지향하며 발전할 것입니다.

44) 《朝日新聞》 1990년 5월 25일 조간 <天皇陛下のお言葉>. 밑줄은 필자가 표시한 것임.

45) 《朝日新聞》 1990년 5월 25일 조간 <盧大統領の答禮あいさつ>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수상도 5월 24일 정상회담에서 다음과 같이 ‘사죄의 말’을 하였다.

과거 한 시기 한반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행위에 의해 건디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체험한 데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고 솔직하게 사죄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다. 계속해서 협의해야 할 점 등은 있지만 이로써 과거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락을 짓고 향후 새로운 관계의 구축을 위해 나아가기를 바란다.

이에 대해 노태우 대통령은 일본 측의 반성을 다음과 같이 받아들였다.

20세기의 응어리에 결말을 짓고 21세기를 향해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만들고 싶다. 수상이 역사에 대해서 말한 인식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의 불행한 역사를 인식하여 반성하는 것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천황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 ‘불충분’하다는 소리가 들렸다. 이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10월 방일하여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수상과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한국 국민에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대신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하였다.⁴⁶⁾

공동선언은 두 나라 사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천황의 ‘말씀’으로 사죄와 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문서로 남겨서 ‘역사문제’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패전으로부터 50년째에 해당하는 1995년 8월 15일에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수상의 담화를 발표하고 과거의 사죄를 분명히 하였다⁴⁷⁾. 무라야마 담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6) 日韓共同宣言, <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 (外務省) 1998년 10월 8일

47) 2008 《日本史B》 (實教出版) 385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에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들에게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또 이 역사가 초래한 내외의 모든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바칩니다.

패전의 날로부터 50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나라는 깊은 반성에 입각하여 독선적인 내셔널리즘을 배척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협조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평화의 이념과 민주주의를 널리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체험에 입각해서 핵무기의 궁극적인 폐기를 지향하여 핵확산금지체제의 강화 등 국제적인 군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에 대한 속죄이며 희생되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길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의지하는 데는 신의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기념할만한 시기에 즈음하여 신의를 시책의 근간으로 삼을 것을 내외에 표명하며 저의 다짐의 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⁴⁸⁾

무라야마 도미이치 수상은 1995년 10월 17일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병합 조약에 대해 ‘대등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맺어진 조약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준엄한 반성 위에 서서, 그리고 사과해야 할 것은 사과하고’라고 답변하였다.

또 같은 해 11월 김영삼 대통령에게 각서를 보내어 한일병합조약을 ‘커다란 힘의 차를 배경으로 하는 쌍방의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민족의 자결과 존엄을 인정하지 않는 제국주의 조약’이라고 말하였다.

전두환 대통령 이래 한일 양국이 ‘과거 역사에의 사죄’와 ‘반성’에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다. ‘병합의 법적 문제’ 등 아직 남아있는 대립은 존재한다. 그렇지만 한일 양 정부가 ‘역사의 사죄’와 ‘반성’에 노력하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일 양국의 교과서가 이 사실을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상호이해와 우호에 중요하다.

한일 쌍방에 존재하는 스테레오 타입적인 상대방에의 잘못된 인식이나 잘못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 ‘몇 번이나 사죄해도 끝나지 않는 한국’과 같은 파이널 보케블러리를 타파하는 것이야말로 한일간의 새로운 관계 구축에 필요하다.

48) 村山富市 수상담화, <戦後50年の従戦記念日にあたって> (外務省) 1995년 8월 15일

Ⅲ. 일본 교과서의 현대 한국에 대한 기술방식

1. 독립과 분단

일본 고교 교과서에서 한반도의 식민지로부터의 해방과 분단에 대한 기술은 애매하다. 일본의 포츠담선언 수락과 무조건항복에 의해 식민지는 해방, 독립하였다. 이 해방에 대한 설명이나 표현이 각 교과에 따라 미묘하다. 山川出版의 《日本史B》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조선에서도 독립에의 움직임이 고조되었지만, 일본의 항복과 함께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북은 소련군, 남은 미국군에 의해 분할 점령되고 군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통일적인 독립을 이룰 수 없었다.

이 기술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기술을 피하고 있다. 일본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은 ‘독립’이다. 일본 교과서로서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였다’라고 써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또 ‘군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통일적인 독립을 이룰 수 없었다’는 기술은 잘못이다. 통일적인 독립을 이룰 수 없었던 원인은 ‘군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내부에서는 통일적인 정부 수립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한국 교과서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국내의 좌우대립과 북한에 의한 총선거 거부 등으로 실현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국 《고등학교 국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미·소 냉전의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민족은 우익과 좌익 세력으로 대립하였다. … 신탁통치에 반대한 우익과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안에 찬성한 좌익이 대립하게 되어, 결국 자주 독립의 통일 국가를 수립하지 못한 채 민족 분단의 길로 가게 되었다.

山川出版의 《日本史B》는 이 《국사》의 표현을 참고로 ‘통일적인 독립을 이룰 수 없었다’라고 기술했을 것이다. ‘통일적인 독립’이란 약간 언어모순이다. 독립은 통일적인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남북통일국가로서의 독립’이라고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 분단에 대해서 山川書店의 《日本史B》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한반도에서는 1948년 소련군 점령지역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수상 김일성)이, 미국군 점령지역에는 대한민국(한국, 대통령 이승만)이 건국되어 남북 분단 상태가 고착화하였다.

이 기술은 ‘남북 분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 분단 “상태”가 ‘고착화하였다’라고 기술하여 ‘상태’와 ‘화’를 사용한 표현으로 회피했지만, 이러한 헛갈리기 쉬운 표현은 써서는 안 된다. ‘남북으로 분단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충분하다.

實教出版의 《日本史B》도 다음과 같이 기술했는데, 문제다.

한반도에서는 민중은 바로 독립을 요구했지만 미국과 소련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분할 점령을 하였다. 그 후 1948년에는 대한민국(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제각기 미소의 지원 하에 독립하여 남북 분단은 고착되었다.

위 기술에서 ‘민중’은 삭제해야 한다. ‘민중’이란 누구를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다. 한반도에서는 좌익과 우익의 격돌이 심했으며 정부의 구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주장과 투쟁이 전개되었다. 또 미소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세력도 있어서 ‘민중’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표현되는 집단이나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위 문장의 ‘남북 분단은 고착되었다’라는 기술은 분명히 잘못이다. 한국의 《국사》에서도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분단의 길(방향)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 시기에는 아직 분단이 고착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분단고착은 한국전쟁 이후이다.

2. 한국전쟁

한국전쟁은 북한의 김정일 수상(당시)이 기획하고 실행한 전쟁이었다. 이 사실은 냉전 붕괴 후 러시아의 공문서관에 남아있는 문서로 확인되었다. 그때까지는 한국전쟁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싸고 ‘내전설’부터 ‘유인설’ 등 다양한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좌익적인 연구자나 학자가 ‘한국전쟁은 미국이 일으켰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원인이 있다’ 등을 주장해왔다. 한때 일본에서는 한국전쟁을 미국과 한국이 시작했다는 주장이 학계나 지식인 사이에서 스테레오 타입적인 패러다임으로서 널리 정착하였다.

미국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⁴⁹⁾는 저서 *The Origin of Korean War*에서 전쟁은 38도선 주변에서 계속되고 있던 크고 작은 전투가 대규모 전쟁으로 발전하였다는 견해를 전개하

였다. 커밍스 교수의 주장은 한국이나 일본의 좌익·혁명계 학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었다. 그것은 이 설에 따르면 북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당초부터 ‘북한의 남침’을 주장한 것은 가미야 후지(神谷不二) 교수와 시노부 세이자부로(信夫清三郎) 교수 두 사람뿐이었다.⁵⁰⁾

그러나 커밍스 교수의 ‘내전확대설’은 냉전종결에 의한 러시아의 공문서 공개로 부정되었다.

이 이론은 일반적으로는 ‘수정설’이라 일컫는다. ‘수정설’은 북한의 남침설을 부정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전개된 분석이다. 영국의 존 할리티와 호주의 대표적 수정주의자 게이번 맥코맥 교수 등은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보고 내전에 개입한 유엔과 미국을 비난하였다.⁵¹⁾ 이러한 수정주의자의 주장과 분석은 현재는 전혀 평가되지 않는다.

김학준 교수는 일본의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교수나 사쿠라이 히로시(櫻井浩) 교수, 나가이 요노스케(永井陽之助) 교수 등을 ‘수정주의자’로 분류한다.⁵²⁾ 이들 학자는 ‘한국과 북한의 국내 냉전에 북한이 소련과 공모해서 한국전쟁을 일으켰다’고 분석하였다. 혹은 ‘한국전쟁은 북한이 민족해방전쟁으로서 시작했는데 미중의 개입으로 국제전쟁으로 변화했다’라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수정주의’는 ‘북한의 남침과 같은 민족에의 살륙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된다.

이러한 분석은 러시아 공문서관에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한국전쟁 개시를 개전 1년 이전부터 소련에 요구했다는 공문서의 발견으로 지금은 평가받지 않는 이론이 되어 버렸다.

그렇지만 이 ‘수정설’을 기본으로 한국전쟁을 분석한 학자는 적지 않았다. 어떤 일본 학회를 지배한, 북한을 어떤 형태로든 옹호하려 했던 연구와 주장은 패배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교과서 기술에는 북한 책임설을 회피시키려는 의도를 띤 기술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은 분명히 네오 콜로니얼리즘이며 일본적 오리엔탈리즘, 나아가서는 좌익의 낡은 패러다임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山川出版의 《日本史B》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49) Bruce Cumings, 1981 *The Origin of Korean War* (Princeton University Press)

50) 金學俊, 2007 《朝鮮戰爭》(論創社) 87·88

51) 김학준, 《앞 책》 112

52) 김학준, 《앞 책》 88·89·116·117

중국혁명의 성공에 촉발된 북한이 무력통일을 노리고 38도선을 넘어 한국에 침공하여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 북한군은 서울을 점거하여 남조선을 석권했다. 미국군이 유엔군으로 개입한 결과,

북한이 ‘중국혁명의 성공에 촉발되었다’는 기술은 잘못이다.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한 연구에서 ‘중국혁명의 성공에 촉발되었다’라는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수설도 아니다. 북한의 지도자도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기술은 마치 북한의 남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우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또 ‘남조선’이라는 표기는 분명히 네오 콜로니얼리즘이다. ‘한국’으로 정정해야 한다. ‘유엔군으로 개입하였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개입’이라는 기술방식에는 ‘부당하다’는 의향이 담겨 있다. 미국군이 유엔군으로서 개입한 것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의 결의로 북한의 남침을 ‘침략’이라 인정하고 다국적군을 ‘유엔군’으로 파견한 것이다. ‘개입’한 것이 아니다.

三省堂의 《日本史B》는 ‘남침’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유엔 안보리에서의 소련의 결석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으나 이것은 문제다.

북한군이 북위 38도선을 돌파하여 한국을 공격하였다.

이 기술은 북한이 ‘남침’했다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해 ‘돌파’라는 기술을 썼다고 생각한다. ‘돌파해서 남침하고’라고 해야 한다. 또는 ‘북한군이 남침하여 한국을 공격하였다’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소련이 결석한 가운데 북한군의 행동을 침략행위로 보고 군사 제재와 유엔군 파견을 결정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이 중에서 ‘소련이 결석한 가운데’라는 기술은 불필요하다. 집필자의 의도는 ‘소련이 결석했기 때문에 유엔군에는 정통성이 없다’는 의도를 담은 것일 것이다. 어쩌면 미국이 소련의 결석을 이용해서 유엔군 파견을 결정하였다고 생각하게 할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왜 결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이 기술은 의미가 없다. 당시 소련은 대만이 유엔에서 중국 대표권을 획득한 것에 항의하여 5개월 전부터 안보리를 보이콧하고 있었다. 또 최근의 보도에서는 ‘소련이 한국전쟁을 후원했다고 보이는 것을 우려해서 결석하였다’는 문서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보면, ‘소련이 결석한 가운데’라는 기술은 적절하지 않다. 삭제해야 한다. 東京書籍의 《新選 日本史B》도 문제다.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 경계인 북위 38도선 부근에서 분쟁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1950년 6월 북한 군대가 38도선을 넘어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이 기술은 말 그대로 학문 연구에서는 완전히 부정된 브루스 커밍스 설에 따른 것이다. 우선 38도선 부근에서 분쟁을 되풀이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분쟁인지 밝히지 않았다.

‘분쟁’의 기술은 군사적인 충돌이나 군부대의 행동을 상기시킨다. 그렇지만 당시의 현실은 분쟁이라기보다도 총격이나 소규모 전투, 그리고 38도선을 넘어 남으로 달아나려는 사람들에 대한 발포였다. 그것을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분쟁이 전쟁으로 확대하였다’는 설에 따른 것이 된다.

그렇지만 북한의 남침은 소규모 전투나 이른바 ‘분쟁’과는 관계없이 당초부터 남침을 의도한 전쟁계획이었다. 그러므로 ‘북한 군대가 38도선을 넘어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라고 기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남침하여 한국전쟁을 시작하였다’라고 해야 한다.

東京書籍의 《日本史B》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냉전이 격화함에 따라 조선에서도 긴장이 고조되어 1950년 6월 북한군이 38도선을 돌파해서 한국에 進攻하여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소련이 결석한 상태에서 북한을 침략자라고 인정하여 제일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파견되었다.

이 기술 가운데 ‘한국에 進攻’은 ‘침공’이라 정정되어야 한다. 또 ‘소련이 결석한 상태에서’라는 기술도 적절하지 않음은 지적한 바와 같다.

清水書院의 《日本史B》도 ‘북한이 남진하여 1950년 6월 전쟁에 돌입하였다’라고 기술했는데, ‘남진’ 표기는 잘못이다. ‘남진’ 기술에는 북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감춰져 있다. ‘남침’이라 해야 한다. 전쟁을 시작한 것은 북한이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實教出版의 《高校 日本史B 新訂版》은 한국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북한책임론에의 언급을 회피하려는 상당히 교묘한 기술 방식이다.

1950년 5월의 총선거에서 참패한 한국의 이승만 정권은 국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북진통일을 주장하였다. 또 북한도 무력에 의한 남쪽의 통일을 진척시키려 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으로 급진격하여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한국원조 결의에 근거하여 미군은 곧바로 한국에 출격하였다. 그 뒤 안전보장이사회는 파병된 각국군을 ‘유엔군’으로 하고 지휘권을 미국에 줄 것을 결정하였다.

이 기술은 마치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 주장이 전쟁 원인이었던 것처럼 오해를 주는 듯한 기술방식이다. 이승만은 총선거 패배 후에 ‘북진통일론’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점심을 평양에서 먹고 저녁식사는 서울에서 하게 된다’ 등의 표현으로 ‘북진통일론’을 부르짖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었다는 것이 한국 정치학회의 통설이다. 당시 한국군에는 전차도 전투기도 없어서 ‘북진통일’이 될 수 있다고는 이승만 본인도 생각하지 않았다.⁵³⁾

이승만의 ‘북진통일’에 대한 기술은 한국전쟁의 원인을 애매하게 하는 기술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 ‘남쪽의 통일’이라는 표현도 ‘한국’이라 표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쓴 기술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군은 남에 급진격하여’라고 하는 것도 ‘남침’이라는 기술을 피하기 위한 표현이다. ‘북한군이 남침하여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편이 문장으로서 단순하다.

또 ‘유엔군’이라고 괄호를 쳐서 표현하였다. 이것은 유엔헌장 7장의 유엔 안보리가 지휘권을 가진 ‘유엔군’이 아니라는 의미일 테지만, 고등학생은 의미를 알지 못한다. 한국전쟁의 유엔군은 유엔기와 유엔사령부 명칭을 허용 받은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유엔군이라 부르기 때문에 구태여 괄호를 붙일 필요는 없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거쳐 구성된 ‘다국적군’이지만 국제적으로도 유엔군이라 부르는 것에 대한 비판은 지금으로는 없을 것이다.

세계사에서는 山川出版社의 《詳說世界史》 기술은 크게 문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전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1950년 6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군은 남북통일을 노리고 경계선을 넘어 침공하여 한반도 남단의 부산지구에 육박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공화국군의 행동을 침략이라 인정하고, 한국 지원을 위해 미국군을 주체로 하는 유엔군을 파견하였다. 유엔군이 공화국군을 반격하여 중국 국경 가까이까지 추격하자, 중국은 공화국 측을 지원하여 인민의용군을 파견하였

53) 김학준, 《앞 책》 85

다. 이후 38도선을 사이에 끼고 공방이 계속되었는데, 53년 휴전이 성립하고 38도선을 사이에 둔 停戰 라인으로 남북분단이 고착화되었다.

이 기술 중에서 ‘공화국군’ ‘공화국’ 표기는 삭제하고 ‘북한군’이라고 해야 한다. 북한과 그것을 지지하는 세력이나 일본의 좌익계 연구자는 북한을 ‘공화국’이나 ‘조선’이라 기술하게 하려고 공작해왔다. 그러나 일본의 신문이나 일반서적의 표현은 어디까지나 ‘북한’이다.

이 기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라 하면서도 ‘북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 또 한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한국)’이라 하지 않고 단지 ‘한국’이라 기술한 것도 공평함이 결여되었다.

《詳說日本史》는 342쪽에서 ‘대한민국(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라고 한 번 기술했으므로 이후에 ‘북한’과 ‘한국’이라 기술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것을 굳이 다시 한 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라 중복 기술하는 것은 이상하다.

또 ‘경계선’이라는 표기는 바르지 않다. 당시는 ‘38도선’이다. 또 ‘38도선을 사이에 둔 정전 라인으로 남북분단’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정전 라인은 38도선을 사이에 두지 않았다. 휴전협정에 의한 비무장지대로 분단되어 있다.

3. 박정희와 김대중 등 지도자의 기술

박정희는 일본의 좌익과 혁신 세력이 가장 싫어한 지도자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가장 평가가 높은 대통령이라는 패러다임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박정희와 김대중의 일본에서의 평가는 한국과는 상당히 다르다.

일본의 세계사 교과서는 한국 지도자의 이름에 대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등의 이름을 기술하였다. 일본사 교과서에서의 기술은 적다. 한국 교과서가 일본 수상의 이름을 거의 기술하고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박정희에 대해서는 민주화 탄압이 강조되고 경제발전의 공적은 거의 기술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三省堂의 《世界史B》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1960년 한국에서는 이승만이 학생운동에 의해 무너지고, 이듬해 1961년에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아 공업화를 도모하려 하였다.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면서 일본 등의 외국자본을 도입하여 중공업을 육성하였다.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자 민주화운동이 고조되었으나 군부의 전두환 등이 1980년에 광주에서 군대에게 다수의 시민을 살해하게 하는 등 철저한 탄압을 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민주주의의 탄압은 1972년 이후부터이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에서는 ‘민주 회복’을 부르짖은 것이다.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면서 …’라는 표현은 이상하다.

4. 천황의 말씀과 무라야마 담화, 사죄

일본의 일본사 교과서도 천황의 말씀과 ‘사죄’에 대해서 전혀 기술하고 있지 않다. 또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서도 기술한 교과서는 극히 적다.

일본 교과서는 일본의 ‘사죄’와 ‘반성’에 대한 노력을 정확히 기술해야 한다.

IV. 북한 인식의 변천

1. 남북통일에 관한 기술의 변화

남북대화 정체의 원인을 북한 측의 강경 자세에서 찾는 기술⁵⁴⁾은 2003년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한편으로 자주 국방을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비밀 협상을 추진하였다. … 유신 체제와 사회주의 헌법을 선포함으로써 남북 간의 평화적인 교류는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하였다. … 그러나 남북한 정부 사이의 공방과 갈등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국민들의 열망을 막지는 못하였다.⁵⁵⁾

평화통일 시도가 계속되었음을 강조한 언설은 2000년 6월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결실을 맺었다는 인식으로 연결된다. 2003년 발행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우리의

54) 1996 《고등학교 윤리》 (대한교과서) 262

55) 2004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천재교육) 314~317

근·현대사는 어두운 측면이 많아 자칫 전 세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성장은 전 세대들이 이룩한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듯이, 남북대화의 진전을 받아들이는 역사적 事象의 재해석이 진행되었다.⁵⁶⁾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북한이 내건 슬로건 ‘3대혁명’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한다.

1954년부터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복구·건설 사업을 강화하였고, 이어서 제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1957~1961). 이 5개년 계획은 초과 달성되었다고 발표되었으나 많은 무리가 뒤따라 그 후유증도 컸다. 이 시기에 북한은 주민들의 생산 노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이른바 ‘천리마 운동’과 새로운 사상·기술·문화를 창조하자는 ‘3대 혁명 운동’도 전개하였다.⁵⁷⁾

처음에는 김일성이 직접 3대혁명소조운동을 지도하였으나, 1974년부터는 김정일이 지도권을 이어받았다. 이후 3대혁명소조운동은 김정일의 단일 지도 아래 전개되었고, 김정일은 북한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⁵⁸⁾

1950년대 북한에서 이미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론이 등장했다고 주장하지만 ‘3대혁명’론이 체계적으로 나타난 것은 1964년의 일이다.⁵⁹⁾ 또한 ‘3대혁명’론에 입각하여 전개된 정신동원을 수반한 증산운동인 ‘3대혁명 소조운동’에 관해서도 김정일이 1974년 단계에서 이를 장악하고 있음을 동시대 사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2. 민주주의와 세계화의 갈등

이상과 같은 기술의 변화는 김대중정권의 성립과 남북정상회담 개최(2000년 6월)를 계기로 한국의 북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한 ‘세계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문맥상에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3년판 교과서에서는 ‘열린 민족주의’ 개념에 대한 기술이 대폭 증가한다.

56) 2003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2007년 제4판) (중앙교육진흥연구소) 3

57) 2003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두산) 310~311

58) 2003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2007년 제5판) (금성출판사) 304

59) 김일성, 1964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로동자》 5호(1964년 3월). 또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에 ‘3대혁명’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필자가 보기에는 1973년 9월 18일자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라는 기사였다.

민족주의에도 좋은 민족주의와 나쁜 민족주의가 존재한다. 좋은 민족주의는 ‘열린 민족주의’이며 나쁜 민족주의는 ‘닫힌 민족주의’이다.⁶⁰⁾

남북한이 서로 넘을 수 없는 벽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려는 긴장감을 안고 살아가는 개체의 공동체가 민족공동체인 것이다.”⁶¹⁾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확고한 민족의식을 가진 구성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기에 이어진다. 단일민족 개념이 그 중핵을 이룰 것임은 이미 명백하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기술에서 지적되는 북한 기술의 변화 배경에 세계화와 민족주의를 어떻게 정합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존재하며 그것이 각종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깔려있다.⁶²⁾

V. 새로운 패러다임 제언

이 논문에서는 한일 현대사에 대한 교과서 기술을 검토하였다. 결론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바란다.

1. 한일 양국의 교과서는 독립 후의 한국과 전후 일본에 대한 기술이 너무나 적다. 양국의 고등학생이 상대국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

2. 양국은 ‘이웃나라의 현대사’에 대해서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또 학교교육에서 ‘이웃나라의 역사’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

3. 한국 교과서는 ‘일제’의 개념을 좀 더 정리하고 이 기술을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시바시 단잔 등 한국인과 한국을 위해 활동한 일본인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 한일의 미래관계와 신뢰를 형성한다고 생각한다.

4. 한국 교과서는 일본의 평화헌법과 헌법9조에 대해서 정확히 기술하기 바란다.

5. 한국 교과서에는 일본의 천황이나 수상이 역사 사죄와 반성에 대해서 노력한 사실을 기술하기 바란다.

60) 2003 《고등학교 시민윤리》 (지학사) 207

61) 2003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지학사) 250~254

62) 다만 “국경이 점차 무의미해짐에 따라 민족주의를 사회 유지의 원동력으로 삼아 온 민족들에게도 대변혁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세계화 시대, 탈민족 국가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과 변혁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2003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287] 등 각 교과·교과서마다 기술이 약간 어긋나 있다.

6. 일본 교과서는 한국과 북한 기술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인민민주주의라는 표기를 많이 사용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라고 반드시 공평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매번 기술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7. 일본 교과서도 천황의 말씀을 언급한 교과서는 없고, 소수의 교과서가 무라야마 담화를 기술한 데 지나지 않는다. 일본 교과서도 천황과 수상의 ‘사죄’와 ‘반성’을 정확히 기술해야 한다.

8. 일본 교과서는 한국전쟁에 관한 잘못된 기술방식을 시정해야 한다. ‘남조선’이나 ‘공화국’의 표현은 삭제해야 한다. 북한의 ‘남침’ 기술도 정확히 기술해야 한다.

이 논문은 일본과 한국이 과거 역사를 거울로 삼아 ‘The Other Theory’와 마주하는 것이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의 역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창조한다는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한일 양국의 역사교과서가 현대사 기술에서 여전히 상대에 대해 충분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교과서는 현대 한국에 대해서 더 기술해야 한다. 한국의 지도자나 대통령 이름 정도는 일본 고교생이 상식으로서 알고 있는 지식수준이 바람직스럽다. 한국의 정치 시스템이나 문화, 독립 후의 역사에 대해서도 기술되지 않은 사실이 많다.

일본 교과서는 김대중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았으며, 천황이나 역대 수상, 관방장관의 반성과 사죄에 대해서도 거의 기술하지 않았다. 이것은 문제다. 일본인 자신이 반성과 사죄에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한국 교과서도 현대 일본에 대한 기술이 너무나도 적다. 이래서는 교과서를 통한 현대 일본의 이해는 어렵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하튼 한국 교과서는 일본국헌법과 일본의 변화를 기술하지 않았다. 한국의 패러다임에서 본다면, 일본인은 신용할 수 없으며 또 한국을 지배하려 온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한일 쌍방의 사회에 존재하는 스테레오 타입적인 생각과, 패러다임, 그리고 파이널 보케블러리를 타파하는 것이야말로 한일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임을 진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생각하기 바란다.

[비평문]

신주백

이 논문은 한일 양국 역사교과서에 대한 현대사 기술 분석의 태도를 네 가지 이론으로 분석하고, ‘제언’으로 끝맺고 있다. 비평자는 양국의 역사교과서 분석에 관한 여러 편의 글을 읽어보았지만 이런 이론적 틀을 가지고 접근한 원고를 보지 못하였다. 독창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제언’ 속에서 현대사 기술의 개선 점 여덟 가지를 간단간단하게 제시하고 있어 양국의 역사교과서 집필자들이 참조할 만한 지적도 많다.

비평자는 그 하나하나에 대한, 그리고 각각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필자가 본문에서 분석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것들이 많지만, 200자 원고지 15장 이내로 비평문을 작성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우선 형식적인 측면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만 지적하겠다.

한일 양국은 애초 한국어 기준으로 200자 원고지 150장 전후로 한 편의 논문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일본측의 다른 통합원고 문제도 있어 200자 원고지 150-200장 사이에서 통합원고를 작성하도록 2009년 11월 28일에 열린 마지막 합동회의 곧, 제13차 회의에서 재조정되었다. 그러나 비평자가 받은 논문의 분량은 271장이다(12월 20일 동경에서의 합동회의 이후 225매로 축소 조정하였다). 이 통합원고는 두 편의 논문을 합친 것이다. 重村智計가 작성한 통합원고의 ‘도입’에 해당되는 ‘제1장 현대사 기술의 분석이론’이 전체 분량의 1/3을 차지한다. 양국 논문 분량의 균형문제가 역사교과서 대화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비평자가 작성한 또 다른 비평문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대신하겠다.

그러면 이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하겠다. 우선, 하나는 1945년 이후 한국과 일본에 대한 기술이 너무 적으며, 상호 이해를 위해 좀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주장에 관해서 이다. 비평자도 이 의견에 동의하지만, 자국사 교과서에서는 관계사의 측면에서,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지역사 속에서 상대방을 기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선 고려한 지적이어야 한다. 그랬을 때 한일 두 나라 중고교 세계사 교과서는 중국을 기본 축으로 동아시아의 현대사를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의 기본 시책과도 어긋나지 않는 접근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설명틀의 구조적 문제점 내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규정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술 분량이 적다는 지적, 내지는 특정한 주제가 다

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은 결국 피상적인 분석일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한국과 북한에 관해 공평하게 기술해야 한다는 지적에 관해서 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교과서 서술의 공평성은 대단히 중요한 집필원칙이다. 그러므로 비평자도 지적 자체는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필자는 양국 지식인들의 불공평한 대표적인 사례로 1970,80년대 《세계》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을 들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한국의 지식인과 민주화운동 세력이 북한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냉전의 금기를 깨기 시작한 시점이 1987년 6·10민주화운동을 통해 최소한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난 이후 전개한 ‘북한바로알기운동’과 통일운동 즈음부터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더 거칠게 말하면 북한문제는 그 이전까지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시야에 들어와 이슈파이팅의 대상으로 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적 네오 콜로니얼리즘이며 북한 종속의 오리엔탈리즘’이란 지적은 역사적 맥락을 간과한 비판인 것이다.

더구나 이 통합원고의 또 다른 필자인 飯村友紀는 한국의 제7차 교육과정이 남북통일을 절대시하면서 북한의 실태를 경시했다고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을 분석적인 근거도 없이 언급하고 있다. 한국의 학교교육에서 남북통일을 부인한 적은 없다. 또한 일부에서 ‘좌파’ 교과서라고 비판하고 있는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조차 북한정권을 기술할 때 ‘독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경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감정개입을 자제하며 역사적 맥락을 중시하고 있을 뿐이다.

비평자는 이러한 기술 경향을 간과한 비판이 한국현대사에서 북한의 역사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 가운데 반복한=반공이념을 드러내는데 급급한 분석의 결과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대결 자세를 우선시하는 태도의 산물이라고 본다. 물론 비평자도 일본인 납치문제를 보편적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하며 북한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만, 비판의 밑바탕에는 북한 사람도 남한 사람과 같은 민족이란 대전제가 깔려 있다.

민족주의를 내세우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교과서 대화의 기본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일찍이 서독이 폴란드와 역사교과서 대화를 할 때, 위원을 선정 하는 기준으로 1) 역사교과서 대화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2) 학문적으로 인정받은 사람, 3) 독일-폴란드의 관계사에 정통한 사람, 4) 특정 이해 단체를 대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참가할 사람과 더불어, 5) 민족주의와 보수주의적 사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적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비평자는 기본적으로 이념 이전에 ‘애정’을 갖고 비판적으로 북한을 바라보

아야 하며, 이러한 경향이 한국의 교과서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일본의 교과서에도 한국인의 감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필자들이 섬세하게 집중해 주었으면 한다.

[집필자 답변]

신주백 선생의 비평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필자로서 배려가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논문의 3분의 1이 ‘분석 이론’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한일의 학문 연구에서 역사 연구는 물론이고 국제 정치의 연구에서도 이론적인 접근이 적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쓰게 된 것입니다. 한일의 학문 연구에서는 이론적 체계적 구축이 많이 없습니다. 또 학문 연구는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서술한 것입니다.

또 교과서 기술의 배경에 있는 일본의 사상·사회 변화를 한국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쓴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회주의의 붕괴로 갈 곳을 잃은 일본의 좌익은 한국의 좌익과의 연대로 도망하였습니다. 그 일본 좌익은 실은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 의식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일본의 좌익도, 한국의 좌익도, 일본 정부와 한국의 보수 세력을 공격한다는 입장에서 이해가 일치합니다. 그러나 그 근거의 심리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의 좌익은 한국에 대한 애국심과 함께 북한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좌익은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멸시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보인 것입니다.

나는 서울 특과원을 하였고 때문에 한국의 북한 연구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북한 연구자 중 다수는 일찍이 한국의 ‘군사 독재’를 비판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민중의 해방’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독재’를 비판하지 않고 ‘민주화’를 요구하지 않고 ‘민중의 해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이중 잣대입니다.

북한에 대해 ‘내재적 접근’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한국과 일본의 분석에서도 ‘내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일 연구자의 다수는 한국에서는 권력자와 민중을 구별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권력자와 민중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또 교과서 연구에서는 학습지도요령을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학습지도요령이 잘못 되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습지도요령의 잘못이 교과서의 기술에 있다면, 그것을 엄격하게 지적하여야 할 것입니다.